

vol.36

June. 2019

모니터링 리포트

이 사람의 향기

- 장애인류의 도전, 세상은 공존으로 굴러간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포커스

- 2019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 정신질환자 범죄를 바라보는 언론보도의 흐름

이슈포착

-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과 향후 과제
: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의 관건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 제도권의 문지기에 만족할 것인가
: 안형진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집행위원장
-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공모 방식 변경
관광+교통+숙박+음식+쇼핑, 관광권역화
장애인 관광환경, 이상과 현실 사이



영화 '그린 북(Green Book)'의 한 장면

사진은 미국 남부 별판, 밭을 일구느라 고단해 보이는 이들이 일손을 멈추고 고장 난 자동차와 두 남성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영화의 배경은 1962년. 멈춰선 자동차는 당시 미국인들의 로망이었던 캐딜락 세단 드빌(Cadillac Sedan Deville)이다.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 수리를 시작하고, 뒷좌석에서 내린 다른 남성은 부채질을 하며 풍경을 둘러보고 있다.

백인 운전수를 고용한 차량 소유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천재 피아노 연주자이며 절제된 감정과 교양을 갖춘 주인공 돈 셐리(Don Shirley)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공한 흑인이다. 그는 인종차별이 만연한 남부지역 순회공연을 위해 '백인' '떠벌이 토니(Tony Lip)'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다. 1960년대 미국, 특히 남부는 "분리하되 차별하지 않는다(Separate But Equal)"는 '짐 크로법(Jim Crow Laws)'으로 유색인 차별이 만연했던 곳이다.

백인 부자들의 문화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셐리는 공연을 마치면 '검둥이' 대접을 받는다. 반복되는 정체성의 혼란과 현실적 괴리감으로 그는 매일 밤 위스키에 의존해 잠이 든다. 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고용주를 가르치려 드는 운전기사 토니는 매번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셐리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더 나아가 셐리에게 허름한 흑인 클럽에서 맨손으로 소울푸드를 먹어 치우고, 낡은 피아노로 재즈 밴드에 맞춰 연주를 하는 '흑인다운' 정체성도 찾아주는 구원자며 조력자다.

이즈음에서 드는 기시감(dejavu 현상)은 왠지 언짢다. 장애인차별로 소재를 옮겨도 늘 되풀이되는 진부한 스토리 전개이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의 뒤바뀐 역할, 사회적 지위가 전복된 불편함을 응시하는 사진 속 인종차별 피해 당사자들의 시선과 표정 속에도 그 '언짢음'이 묻어 있는 듯하다.

Contents

2019 여름 | Summer

- 02 편집자 편지
이행방식도 인권을 고려해야
- 04 이 사람의 향기
장애인류의 도전, 세상은 공존으로 굴러간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 16 포커스 1
2019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 28 포커스 2
정신질환자 범죄를 바라보는
언론보도의 흐름
- 32 이슈포착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과 향후 과제
- 38 이슈포착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의 관건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
제도권의 문지기에게 만족할 것인가
- 44 이슈포착 3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공모 방식 변경
관광+교통+숙박+음식+쇼핑, 관광권역화
장애인 관광환경, 이상과 현실 사이
- 52 영화평
특별하지 않은 장애인의 등장
육상호 감독의 <나의 특별한 형제>
- 58 포럼은 지금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 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물음표와느낌표 02) 822-0772

이행방식도 인권을 고려해야

무한경쟁 시대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경쟁사회 참여자인 기업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심이 많다. 국가도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회적 가치도 경쟁력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놓았기 때문이다. 아래를 살펴야 앞이 보이는 세상인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인데, 다행히 다양한 이행지침들도 공개되어 있다.

지침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방향’,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립, 이행모니터링, 정보공개 과정에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수립 및 이행, 정보공개 등 전 과정에서 인권 침해 회피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도 <이 사람의 향기>인터뷰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당사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 유무도 중요하지만, 이행방식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 16조 이행을 구체화 한 일반논평을 준비해, 보다 취약한 장애소녀, 장애아동, 장애여성의 인권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동국 선임연구원은 <포커스1>에서 올해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을 작년과 비교 분석했다.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예산공개 방식이 변경되면서, 작년까지 장애인 예산 편성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17곳의 소관부처에서 장애인 예산을 발췌하였다.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세부내역은 올해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해 올해 주목해야할 예산항목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지윤 연구원은 <포커스2>에서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2016년 5월 17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2018년 12월 31일)’,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2019년 4월 17일)’을 다룬 기사를 분석했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내 주요 일간지의 시각 변화를 짚었다. 언론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이슈포착1>에서 서해정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이 오늘 7월 중·경증으로 단순화된 장애등급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감면·할인제도 영역에서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이슈포착2>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이슈를 다루었다. 안형진 집행위원장(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은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에게 ‘시민권 문지기’가 아닌, ‘능동적 시민권의 동지’ 역할을 주문한다. <이슈포착3>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열린관광지 사업공모 방식을 윤선에 선임연구원이 정리하였다. 관광지와 교통, 숙박, 음식, 쇼핑을 관광권역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영화평>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시설에서 함께 자라온 지체장애인 세하와 발달장애인 동구 형제 이야기를 다룬 ‘나의 특별한 형제’를 다루었다. 주인공들의 캐릭터나 두 사람 사이 관계의 의미와 영향은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영화제목 ‘나의 특별한 형제’를 한 번 더 생각해 한다.

2019년 6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홍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장애인류의 도전, 세상은 공존으로 굴러간다

정리 | 윤선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사진은 김미연 위원 제공.
출처는 신동아입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의 조상을 그 밖의 종과 구별하는 핵심 요소였다. 앞다리가 누리게 된 자유는 세상을 향해 도전했다. 두뇌는 그 도전에 답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인류는 그렇게 생겨났다.⁽¹⁾ 몇몇의 사람속(Homo)⁽²⁾은 진화했고, 멸종했다. 진화론은 최상의 유전자가 승리한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 한다. 몇몇 고고학자들은 인류의 신체적 나약함 때문에 동정심, 의사소통, 학습능력 같은 적응력이 발달했다고 주장한다.⁽³⁾ 우월한 유전자가 아닌 장애와 취약함이 인류를 공존의 전략으로 이끈 것이다. 호모 하빌리스(손을 쓴 인류), 호모 에렉투스(직립인류),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류)의 역사는 장애인류⁽⁴⁾와 함께한 공존의 역사일지도 모른다.

‘저희는 여성장애인이라고 안 해요. 장애를 가진 여성의 관점에서 장애여성이라고 하죠.’ 혜화동 이음센터에서 만난 김미연 위원은 질문지의 문구를 바로잡아 주며 말한다. 유엔은 2018년 6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177개국 가운데 99개국의 지지를 받은 김미연 위원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선출했다. 한국 여성 최초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 당선이었다.

바쁜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에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34조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하구요. 비준은 당사국이 국회라든지 자국의 법으로 승인한 거죠. 비준 당사국에게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비준은 안하고 협약에 사인만 한 국가도 있구요. 협약과 함께 선택의정서(이하 의정서)가 있는데요. 한국은 협약만 비준하고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계는 정부에 의정서 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하고 의정서를 채택한 국가의 장애인, 자국의 사법절차를 다 거쳐도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이 안 될 경우, 국가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

(1) Mary Leakey, National Geographic, 1979년 4월호(걷기의 역사, 레베카 솔릿)

(2) 인간이라는 용어는 현생인류와 그 직계 조상을 포함하는 분류인 사람속을 의미, 위키백과

(3) Internet Archaeology 40, <https://doi.org/10.11141/ia.40.3>, 인간의 진화와 취약한 유인원 가설

(4) 김미연 위원은 인터뷰에서 '장애인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니다. 그러면 조사를 나갑니다. 사안별로 팀을 꾸려서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국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고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만, 유엔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는 부담이 되니까요. 적극적인 소통이 시작되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입니다.

또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의무적으로 그 이행에 대한 첫 국가보고서를 비준 후 2년 이내, 그 후로는 4년마다 최종견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민단체들의 보고서도 제출되죠. 제출된 나라별 보고서를 살펴보고, 해당 국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합니다. 그에 따른 권고, 최종견해라고 하는데요. 이 최종견해를 내는 것이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거 후보로 나서기까지 개인적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장애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죠. 특히,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초안에도 없던 장애여성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예산을 투입했던 점. 저를 위원회 후보로 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 그 자체가 국제사회에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장애계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선거는 2년마다 있어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의 위원이 2016년도 선거에서 공석이었습니다. 당시 선출된 9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니다. 결과적으로 18명의 위원 중 여성은 1명인 셈이 되었죠. 위원회의 구성은 대륙별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성의 균형도 중요한데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전 세계 장애여성단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6년이 협약 제정 10년이 된 해였는데, 협약에 장애여성 조항을 어떻게 넣었는데, 장애여성이 위원으로 뽑히지 않는 건 퇴보다. 너무 안일했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애여성계는 2018년 선거를 준비하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된 거죠. 서로서로 후보로 나설 것도 독려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말이죠.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장애계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위기의식에 후보로 나설 결심을 했죠. 협약에 장애여성 조항을 넣으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잘 굴러갈 줄 알았거든요. 10여명의 훌륭한 여성위원들이 10년 동안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2018년 6월 12일(화,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장애인권리위원회(CRPD⁽⁵⁾) 위원 선거에서 김미연 위원님이 선출됐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177개 당사국 가운데 99개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중 첫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이구요. 선출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선거 캠페인은 2018년 2월, 4월, 6월 이렇게. 각 1주일씩 해서 120개국을 만났어요. 제가 많은 국제 활동을 했지만 30개국 이상 다녀본 적이 없더라구요. 근데 선거 캠페인이라는 기회는 한 자리에서 120개국 외교관과 대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장애문제를 알 수 있어 고무적이었어요.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제 인생에서 언제 100여 개국의 인사를 만나겠어요.

협약 제정 전보다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 인권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자국의 후보를 반드시 선출되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장애인식개선의 기회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저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 나라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시간만큼은 유엔 대표부 외교관들이 장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협약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장애 관련 이슈의 확산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재미도 있었구요.

(5) 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 유엔본부에서 심의대상 국가에게 질의하는 김미연위원
-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 당선 축하 받는 모습



- 3 유엔 여성참여 캠페인 활동 모습
- 4 외교부 주최 후보자 소개리셉션
- 5 심의간담회 후 핀란드 NGO대표단과 기념촬영



저는 바닥에서부터 장애운동을 해온 당사자로서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당시 왜 후보로 나오게 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생후 11개월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삶 자체가 한국 장애인 권리투쟁의 역사와 함께 했으니까요. 그것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서 사회를 바꾼 역사.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30명의 후보가 나올 만큼 치열했습니다. 근데 선거 전날 8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가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외교부가 사퇴 후보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1차 선거에서 선출된 5명중 5위로 선출되었어요. 나머지 후보들은 2차 선거까지 치룬 후 선출되었어요.

재밌는 건 1차 선거에 뽑힌 5명 중 1, 2위는 재선이었고 3, 4위는 유럽계 후보였어요. 비유럽계 재선이 아닌 후보는 사실상 제가 1위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놀랐죠. 1위 보다 제가 더 축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죠. 북한 유엔대표부에서도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런 축하를 받다니. 그런 마음이었죠.

2006년 만들어진 장애인권리협약에 원래는 없던 장애여성조항을 넣는데 김위원님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장애여성 조항이 협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협약을 제정 하려면 국제법상 초안을 마련합니다. 이걸 각국 정부가 모여서 유엔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초안에 장애여성조항이 없었어요. 장애인권리협약인데, 장애여성 조항이 없는 거죠. 1980년대 만들어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모든 여성을 위한 조항이 있는데, 장애여성을 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장애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성정책에서는 장애의 관점이 부족해서 소외되어 왔는데, 장애정책마저 여성의 관점이 부족해서 소외된다면 장애여성은 영원히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에서 협약 초안에 반드시 장애여성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장애여성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운동이 한창이어서

서, 왜 장애인권리협약 초안에 장애여성이 없냐. 이걸 말도 안 된다 싶었죠. 우리 유엔대표부가 저희가 제안한 장애여성 조항을 받아서 본회의에 올려버린 거예요. 초안에도 없던 조항을. 일단 저지르고 본거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각국 정부를 설득하고 세계장애여성단체들은 자국의 정부에 압력을 넣고 설득했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왜 장애여성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전 세계 장애여성들이 사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장애여성 조항을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설득했고 한국의 장애여성, 세계의 장애여성이 국가를 설득했죠. 그렇게 해서 초안에도 없던 조항이 생겼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복지, 보호, 지원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만 이것만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인권의 관점입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정책이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그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권의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진행과정이 차별적이거나 반인권적 이라면 그런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과거와 달리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심의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사회가 가진 억압체계를 면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짜 정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라마다 국가보고서와 쟁점목록, 시민단체들이 제출하는 평균 3~5개의 보고서까지 다 공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라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와 진짜 심각한 나라들은 국제 시민단체에서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나라별로 검토해야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활동 중 김미연 위원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과 임기 내에 꼭 성과를 내고 싶은 사안은 어떤 것인가요.

일반논평이라고 있어요. 협약의 조항만으로는 국가든 시민단체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각 조항의 배경과 이론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당 조항을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런 것을 담은 것이 일반논평입니다.

일반논평이 필요한 조항은 33개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7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일반논평 초안을 만들면 전 세계 모든 시민사회와 장애계에게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더딘 거죠. 초반에는 5년 걸려 작성된 조항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대 2년으로 줄었습니다. 또 시급한 쟁점 조항부터 일반논평을 낼 수 있도록 조정되었어요.

제가 관심 갖는 조항은 16조⁽⁶⁾ 폭력, 착취, 학대 조항 이에요.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장애소녀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 생존 자체의 문제죠. 국가가 이와 관련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보다도 16조에 대한 일반논평을 제 임기 중에 반드시 내고 싶습니다. 일반논평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국가는 답변을 회피해 버립니다. 하지만 일반논평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기반 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거죠.

정책연구, 학자, 여성운동 등 국내의 다양한 자원에 감사하고 시민사회에 감사하면서, 저는 잘 조직해서 함께 하도록 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제가 뛰어난 국제인권 법학자나 영어가 유창하면 혼자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다 끌어 들어야하다 보니, 저절로 확장이 돼서 좋아요.

장애등급제가 곧 폐지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는 등 장애계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6)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7) 유엔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애 데이터 구축을 위해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WG)'이 개발한 장애판별 질문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 질문지를 도입하였다.

원칙적으로 증중 경중 나는 거 자체가 위반이고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개별의 욕구에 기반 한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어쨌든 의학적으로 측정하잖아요. 그 측정과정도 반인권적이지만, 장애인의 사회적 삶을 지원하는데 의학적 기준을 적용 한다는 건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워싱턴그룹 통계⁽⁷⁾ 원칙에 의해서 장애인의 욕구를 데이터화한 유엔 내의 자료가 따로 있어요. 장애 관련 통계를 낼 때 이 장애관별 질문지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지만, 나라마다 의무는 없습니다. 세계의 장애인들이 각국에 인용할 것을 권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장애계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진지한 논의구조와 소통, 그것을 합의해 가는 힘.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논의과정에는 없지만 결과에 따라 삶의 영향을 받은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영똥한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합의란 이익을 절충하는 합의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담론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인권이 뭔지, 장애등급제가 당사자에게 어떤 것인가를,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논의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질의목록을 중심으로 NGO연대의 조사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NGO연대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장애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7년이 걸렸어요. 그때 사안별로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CRPD NGO연대가 분과별로 모여서 CRPD 보고서 작성 때문에 공부하는데, 보고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이행기구로 가면 굉장히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논의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국가의 CRPD이행에 대해서 장애계가 스스로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고 이행을 촉구하는 거죠. 지금의 NGO연대가 모니터링을 위한 연대로 전환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심의를 위한 보고서 작성시에만 모여 논의 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게 CRPD 이행 계획을 시스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NGO연대 활동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계는 협약을 국내 장애인 인권운동과 연계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 12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시민연대 워크숍에서 보고서 심의과정 강연중인 김미연 위원과 기념촬영
-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당선후 국내 축하연에서 기념촬영



장애복지 21 신문 기자로 일하셨다는 이야기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대표님의 학창 시절과 사회 진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여성계가 참가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장애복지21 신문사 기자로 취재를 갔죠. 여성계가 모여 의제를 논의하더라구요. 북경에서 세계 여성단체들이 다 모인다. 우리는 어떤 의제를 가져갈 것인가. 근데, 거기에 장애여성은 없었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장애여성은 여성이 아니냐고, 왜 장애여성 의제는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저보고 제안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장애여성 의제를 들고 북경으로 갔습니다. 세계의 장애여성을 처음 만난 거죠. 여성운동도 처음이었고, 200명 가까운 세계의 장애여성들이 모였는데,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저희 장애여성 텐트가 언덕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침 비가 와서 휠체어는 진흙에 빠지고 지팡이는 미끄러지고, 장애여성들이 접근성에 대해 성토회를 열다가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텐트가 아닌 중앙본부석에서 모이자고,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여성들이 앞장서고,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여성들이 그걸 붙잡고 기차처럼 떠를 만들어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의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장애여성도 여성이라고, CNN을 비롯한 국내 방송사의 주목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제가 갑자기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초안을 만들 때는 장애인 대표와 정부 대표가 반드시 같이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장총련 정책 실장이었던 제가 가게 된 거죠. 갔더니 협약 초안에 장애여성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북경 대회 때 함께 시위했던 세계장애여성 대표들을 만났어요.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준 북경세계여성대회, 그때 만난 세계장애여성들과의 인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초안에서의 위기의식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장애여성운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추억,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여성운동 초장기 때 장애여성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할 장애여성이 없는 겁니다. 장애여성 인권 아카데미라고 모였는데, 장애여성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어렵게. 그래서 수다를 통해 자신의 삶을 풀어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러한 동질감이 장애를 겪는 여성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나를 드러내는 예술기법을 시도해 봤어요. 나의 모습과 되고 싶은 나를 그려보고, 그렇게 자기표현예술 워크숍을 했어요. 당시 하와이에 사는 트리나 남미 조교수님을 초청해서, 천 하나 종이 하나가 표현하는 감정이 모이니까 춤이 되더라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장애여성의 이야기가 예술로 통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여성문화공동체라는, 장애여성이 자신의 몸과 감정 그리고 표현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만든 거죠.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선출된 뒤 많은 강연을 다녔다는 김위원은 초청 받은 학교에 요청하는 것이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는지 물어보고 센터 담당자와 장애학생을 참석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고,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젊음만으로 아름답고 빛났다는 걸 그땐 몰랐다고,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라고.

장애인권리협약은 힘이 없을지도 모른다. 국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이진 않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고, 세상은 천천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협약은 이상적인 기준일 수 있다. 그 이상적 기준이나를 바꾼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나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 있다. 그게 힘이라고. 협약의 진정한 효과는 거기에 있다고 김미연 위원은 말한다. 장애인이류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는 것. 협약은 장애인이류에게 말한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라고. 상황을 바꾸는 힘은 당신에게 있다고.

2019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한동국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올해는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되는 해다. 과거 정부와 달리 보건, 복지, 노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노력하였다. 장애계도 기대가 컸다. 정책과 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싶다. 정부는 2018년 3월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통합사회 실현의 뜻을 담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2018년 경우,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중심으로 장애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종합계획을 고려할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아쉬움은 현재까지 장애계가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또 다시 거리로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5월에 2019년 중앙정부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예산을 종합계획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2019년 5월(1개월)
2. 모니터링 대상: 중앙정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3. 모니터링 자료: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2019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자료, 각 목 명세서
4. 모니터링 자료 습득방법: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방법

2019년 중앙정부 예산자료는 정부 내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된 '사업설명 자료집과 각 목

명세서'를 수집하였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완하였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8년부터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축적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가 도출한 핵심키워드를 활용해 발췌하였다. 사용한 핵심 키워드는 아래 <표1>과 같다. 센터는 발췌한 장애인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세부사업명과 세부내역을 정리한 후, 성격별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표1 장애인 예산 발췌를 위한 핵심 검색 키워드

장애, 편의, 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 한센(병), 재활, 특수교육, 정신보건, 휠체어, 수화, 특수보육, 센터도우미, 웹 접근성, 저상버스, 특별운송, 특별교통, 언어발달, 발달, 미숙아, 대사이상, 난치, 난청

2019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

2019년 중앙정부 예산은 총 469.6조원이며,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췌한 장애인 예산 규모는 4,270조원이다. 작년 대비 9,060억 원 증가한 것이고, 중앙정부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0.13% 증가한 약 0.91% 수준이다.

표2 2019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규모

(단위: 조, %)

구분	중앙정부 예산규모 (2018-2019)		장애인 예산규모 (2018-2019)		장애인 예산 비율 (2018-2019)		
중앙정부 예산	'18년	428.8			중앙정부 예산	'18년	0.78%
		△40.8				'19년	0.91%
중앙 정부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예산	'18년	133		△906	소관별 사회복지 예산	'18년	2.5%
		△28				'19년	2.6%
보건복지부 예산	'18년	37.4	'19년	4.270	보건복지부 예산	'18년	6.7%
		△8				'19년	7.1%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중앙정부 예산정보)

〈표2〉를 보면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증가한 추이를 볼 수 있다.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가 5%인데 반해, 중앙정부는 장애인 정책에 1%도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예산인 161조원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도 2.6%로 역시 총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5% 보다 적다. 장애인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총 예산은 45.4조원이다. 이 중 장애인 예산은 3조 2,475억 원이다. 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7.1%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0.4% 증가한 셈이다.

2019년 장애인 예산 약 4.270조원 원이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보건복지부에 3조 2,475억 원(76.05%) 규모로 가장 많은 장애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4,055억 원(9.50%), 고용노동부 3,896억 원(9.12%), 문화체육관광부 941억 원(2.21%), 교육부 782억 원(1.83%) 순이다. 작년에 비해 부처별 장애인 예산 반영 순위가 조금 달라졌지만, 2018년 예산편성비율⁽¹⁾과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등 4곳에 편성된 장애인 예산 비율이 98.71%에 이른다. 그 외 여성가족부 등 20곳의 소관부처는 1% 미만이었다. 장애인지적 관점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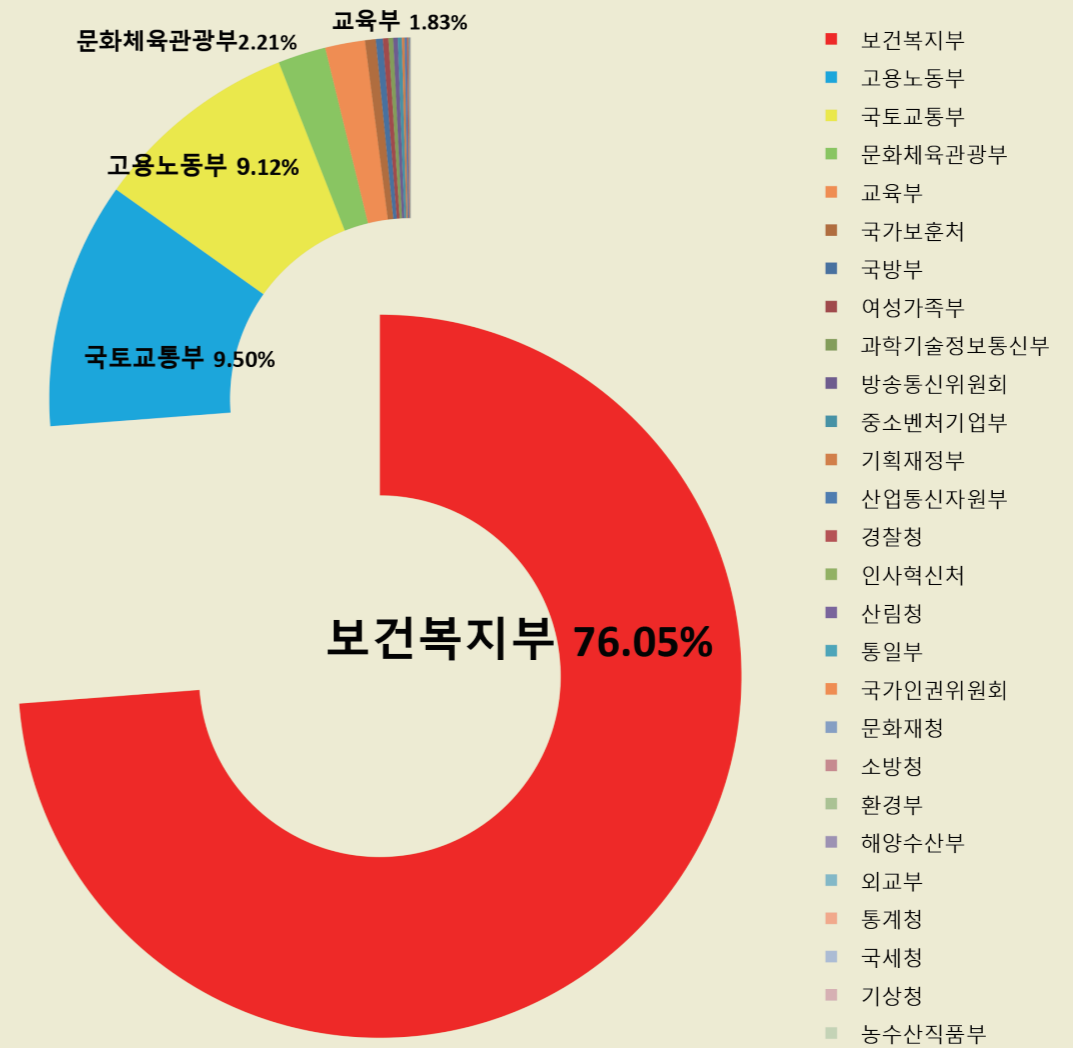
표3 2018년, 2019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예산 증감률 분석

(단위: 천 원)

소관부처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예산비교	증감률	비고
보건복지부	2,508,039,253	3,247,597,627	△ 739,558,374	△ 29.5%	고정적으로 증가한 예산
고용노동부	258,279,000	389,635,095	△ 131,356,095	△ 50.8%	
국토교통부	370,899,000	405,584,000	△ 34,685,000	△ 9.3%	
문화체육관광부	13,981,304	94,173,118	△ 80,191,814	△ 573.6%	
교육부	74,859,922	78,262,622	△ 3,402,700	△ 4.5%	
여성가족부	3,926,247	10,817,000	△ 6,890,753	△ 175.5%	
중소벤처기업부	7,750,000	7,975,000	△ 225,000	△ 2.9%	
인사혁신처	500,000	1,366,909	△ 866,909	△ 173.4%	
국가인권위원회	548,000	648,000	△ 100,000	△ 18.2%	

(1) 2018년 예산편성비율 보건복지부 74.6%, 국토교통부 11.0%, 고용노동부 7.7%, 기획재정부 3.7% 교육부 2.2% 문화체육관광부 0.4% 순이었음. (2018년 정책예산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중)

2019년 중앙 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 예산 비율



▲〈그림1〉 장애인 예산 비율

환경부	303,000	308,000	△	5,000	△	1.7%	
기획재정부	124,206,000	5,287,000	▼	118,919,000	▼	95.7%	감소하거나 없어진 예산
병무청	8,504	0	▼	8,504	▼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16,406	0	▼	716,406	▼	100.0%	
행정안전부	12,966	0	▼	12,966	▼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9,381,960	△	9,381,960	△	100.0%	
방송통신위원회	0	8,800,000	△	8,800,000	△	100.0%	소관부처의 예산서 작 성 방식에 따른 새로 게 발췌된 예산
산업통신자원부	0	4,400,000	△	4,400,000	△	100.0%	
경찰청	0	2,672,000	△	2,672,000	△	100.0%	
산림청	0	1,223,000	△	1,223,000	△	100.0%	
통일부	0	855,000	△	855,000	△	100.0%	
문화재청	0	638,040	△	638,040	△	100.0%	
소방청	0	521,748	△	521,748	△	100.0%	
해양수산부	0	31,800	△	31,800	△	100.0%	
외교부	0	31,000	△	31,000	△	100.0%	
통계청	0	11,548	△	11,548	△	100.0%	
국세청	0	9,500	△	9,500	△	100.0%	
기상청	0	8,000	△	8,000	△	100.0%	
농수산식품부	0	4,800	△	4,800	△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0	1,000 28,589,396	△	1,000	△	100.0%	
합 계	3,364,029,602	4,270,243,767	△	906,214,165	△	26.9%	

〈표3〉은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예산 규모를 작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은 4,270조 원이며 작년 예산 3,364조 원 대비 약 26.9%가 증가했다. 고정적인 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이 작년 대비 29.5%가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50.8%, 국토교통부 9.3%, 교육부 4.5%, 중소벤처기업부 2.9%, 환경부가 가장 낮은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작년대비 약 573.6%가 증가한 장애인 예산을 반영하였다. 여성가족부나 인사혁신처도 작년 대비 각각 175.5%, 173.4%로 장애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부처별로 대표적인 증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과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장

애인고용장려금 예산, 장애인식개선 예산,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예산,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도서관운영 예산, 교육부는 장애학생 지원 예산,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 예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육성 예산,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는 장애인인권증진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

작년 대비 장애인 예산이 감소한 소관부처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장애인 예산을 1,242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으나 2019년에는 1,189억 원이 감소한 52억 원을 반영하였다. 병무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작년까지는 장애인 예산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반영하지 않았다.

부처별로 감소하거나 없어진 대표적인 예산내역을 소개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및 장애아동 입양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어있지만, 작년에 큰 예산을 반영했던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저상버스 설치운영 예산을 올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승강기 관련 예산과 장애인 통행로 타일공사 예산을 올해에 반영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단체 간담회 예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정당보조금 내 장애인추천보조금 예산이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청사 내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과 국경일 행사 수화통역비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2018년 장애인 예산을 반영 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4곳 소관부처들이 올해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5억 원 규모의 예산이다. 새롭게 반영한 장애인 신규 예산들도 있었고, 원래 장애인 예산으로 반영 했지만, 소관부처들의 예산서가 다소 통합적으로 기입되어 작년 예산모니터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발췌가 어려웠던 예산들이다. 올해는 예산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장애인 예산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예산, 산업통신자원부의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 예산, 경찰청의 장애인성폭력범죄예방 및 장애인성범죄수사 지원 예산, 산림청의 국립자연휴양림조성으로 장애인 전용 객실 확충 예산, 기상청, 농수

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예산이다. 또한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과 통일부, 외교부, 국세청의 장애인제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예산,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기능건강장애 분류 연구 예산 들도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주거, 문화, 체육 등 각각 해당 소관부처별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예산은 장애인의 기본 소득 보장과 일상생활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 지원예산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다른 소관부처에 비해 장애인 예산 편성비율이 높은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순위로 나타낸 자료가 있다. 1순위가 소득보장, 2순위 의료보장, 3순위 고용보장, 4순위 건강관리, 5순위 주거보장, 6순위 이동권 보장이다. <그림1>과 <표3>처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4곳의 소관부처들에 장애인 예산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보다 많은 예산확보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2019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성격별 분류

분야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예산비교	증감률
자립생활	690,712,440	1,018,957,000	△ 328,244,560	△ 47.5%
소득보장	846,759,415	981,542,425	△ 120,963,010	△ 14.2%
의료·재활	231,684,684	589,998,807	△ 358,314,123	△ 154.6%
장애인시설	596,425,807	563,378,644	▼ 33,047,163	▼ 5.5%
고용·취업	351,951,000	504,665,314	△ 152,714,314	△ 43.4%
복지행정, 단체 지원	481,954,244	474,474,932	▼ 7,479,312	▼ 1.6%
문화·체육·정보	49,427,304	86,762,150	△ 37,334,846	△ 75.5%
이동·편의	115,114,708	64,284,495	▼ 50,803,213	▼ 44.1%
합 계	3,364,029,602	4,270,243,767	△ 906,214,165	△ 26.9%

질적 분석을 위해 <표4>와 같이 장애인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생활, 장애인시설, 고용·취업,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복지행정·단체 지원 8가지로 분류해 전년도 예산과 비교 분석하였다.

자립생활, 소득보장, 의료재활, 고용취업, 문화체육정보 분야가 작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시설과 복지행정, 이동편의 분야 예산은 감소가 되었다. 2018년 자립생활분야 예산은 6,907억 원이며 올해는 3,282억 원이 증가한 1조 189억 원이다. 이 같은 추이는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나 장애여성 예산 증가도 한몫했다.

소득보장 분야는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로 2018년 8,467억 원에서 올해는 9,677억 원으로 1,209억 원이 증가하였다. 소득보장 예산은 아무래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의료·재활 분야는 증가율이 가장 높다. 2018년 2,316억 원에서 약 154.6%가 증가한 5,899억 원이 편성되었다.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예산과 재활치료 예산이 대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고용·취업 분야는 2018년 3,519억 원에서 올해는 약 43.4% 증가한 5,046억 원이 편성되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최대 이슈인 23.5조원 의'일자리'예산의 영향이 컸다. 문화·체육·정보 예산은 2018년 494억 원에서 올해 373억 원이 증가한 867억 원이다. 의료재활 분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 내역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의 체육활성화, 여행 환경 조성 지원예산 등이다.

반면 장애인시설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다. 2018년 5,964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올해는 5,633억 원으로 330억 원이 감소하였다. 장애인 복지행정과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은 2018년 4,819억 원에서 올해는 1.6% 감소한 4,744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동, 편의분야도 2018년 1,151억 원에서 올해는 642억 원으로 508억 원이 감소했다.

눈 여겨 볼 2019년 장애인 예산

중앙정부 내 소관부처별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눈 여겨 볼만한 예산이 많이 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표5 눈 여겨볼만한 2019년 장애인 예산
(2019년 장애인 예산 순위 TOP 5 소관부처 중에서) (단위: 천 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예산
보건복지부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추진 (장애인, 정신질환) - 신규사업	1,555,000
	발달장애인 지원 - 계속지원 사업	42,719,644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맞춤형취업지원 - 신규사업	1,349,000
교육부	국립대학교 시설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계속지원 사업	4,960,000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용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 관리 - 신규사업	1,342,000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 환경조성 - 계속지원 사업	4,046,000

먼저 커뮤니티 케어 추진사업 예산이다. 돌봄 수요자가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예산이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예산은 15억5,500만원이다. 정부가 탈시설화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예산이 규모가 너무 작고,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만든 예산이라는 장애계의 평가가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연말까지 진행된 성과에 따라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제2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지원예산도 주목해야 한다. 작년 86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에 400% 가까이 증가한 42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전국장애인부모 연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위해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서비스, 가족 지원, 데이서비스(Day service)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90%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직업, 주간 활동지원, 주거 등의 책임을 가족과 함께 분담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독립적인 직업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사업체 현장 훈련 등 취업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예산을 13억4,900만 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고정 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고속·시외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추진예산은 13억4,2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용수요, 연계교통 수단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부 노선은 18대를 투입·시범 운영을 하고, 2020년부터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49억6,000만 원을 책정해 전국 국립대학교 2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환경개선 예산이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0억4,600만 원을 책정하였다.

장애인 예산을 바라보는 두 시선

지난 4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 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리포트 내용 중 2019년 장애인 예산을 보면 센터에서 분석한 장애인 예산과 차이점이 있다.

표6 2019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주요 장애인예산 비교
(모니터링센터 VS 나라살림연구소) (단위: 천 원)

소관부처	예산		예산비교 (B 대비 A)	예산 차이의 주요 근거
	모니터링센터(A)	나라살림연구소 (B)		
보건복지부	3,247,597,627	2,851,259,000	△ 396,338,627	자립생활지원, 정신건강 보건보조기기지원 여성 장애인지원 한센병지원, 장애인건강증진
고용노동부	389,635,095	2,519,768,000	▼ 2,130,132,905	산재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국토교통부	405,584,000	47,651,000	△ 357,933,000	철도운영 PSO 보상
문화체육관광부	94,173,118	69,527,000	△ 24,646,11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확충 열린관광지 조성, 함께누리 지원

교육부	78,262,622	68,948,000	△	9,314,622	편의시설확충,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국가보훈처	0	1,025,694,000	▼	1,025,694,000	고엽제 수당, 상이군인 재활지원
국방부	0	13,725,000		13,725,000	장애보상금
여성가족부	10,817,000	10,169,000	△	648,000	장애청소년 성교육 장애인 성폭력피해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81,960	1,100,000	△	8,281,960	장애인방송제작, 웹접근성
중소벤처기업부	7,975,000	7,975,000		0	
기획재정부	5,287,000	5,032,000	△	255,000	예산서 자료 오류
인사혁신처	1,366,909	789,000	△	577,909	편의시설 확충, 직원 채용지원
국가인권위원회	648,000	648,000		0	
그 외 소관부처	19,515,436	0	△	19,610,436	발체를 안함
합 계	4,270,243,767	6,622,285,000	▼	2,352,041,203	

〈표6〉를 보면 장애인 예산 합계가 차이를 보인다. 센터가 집계한 장애인 예산은 약 4조 2천억 원이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집계 장애인 예산은 약 6조 6천억 원이다. 약 2조 3천억 원의 예산 합계 차이를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장애인 예산에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지원 예산과 보훈처의 상이군인 재활 지원예산과 국방부의 장애보상금 지원 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3조원대의 세 예산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입은 이들’을 보상해주거나 재활환경을 구축 해주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중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장애인 예산에 이 세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보다 앞서 산재보험급여 재원은 재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기여금이고, 고엽제 수당이나 상이군인 지원 예산은 국가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도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지원 예산과 보훈처의 상이군인 재활 지원 예산 국방부의 장애보상금에 대해 “국가의 장애인 관련 지출은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애를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현장, 군인 특히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보편적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 관련 지출이 더욱 커져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론

2019년 장애인 예산은 약 4,270조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총 469.6조원 대비 약 0.91% 수준이다. 작년 대비 9,0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도 0.13% 증가하였다. 장애인 예산 규모는 작년 3,364조 원 대비 약 26.9%가 증가했다. 예산편성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서 예산 증가가 있었다. 규모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의 예산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성격별로 접근하면 자립생활, 소득보장, 의료재활, 고용취업, 문화·체육·정보 분야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장애인시설과 복지행정, 이동편의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다.

부처별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과 발달장애인 지원예산(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고용노동부), 장애인 이동편의, 주거복지 예산(국토교통부), 장애인 체육, 문화 예산(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 평생교육지원 예산(교육부), 여성 장애인성폭력 피해 지원(여성가족부), 시청각 장애인 대상 방송 접근권 지원 예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인권교육, 인식개선 활동 예산(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예산 증가내역과 장애인의 욕구(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기반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합계획 사이의 연계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의 예산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와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문제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가 예산의 확보, 편성은 물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야 할 이유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바라보는 언론보도의 흐름

한지훈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언론에 따라 인식이 변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을 살펴보자. 국내 10대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이상 가나다 순)가 보도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2016년 5월 17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2018년 12월 31일)’,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2019년 4월 17일)’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이내, 온라인 신문스크랩을 제공하는 아이서퍼를 활용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 직후, ‘여성혐오’ 범죄로 접근하는 기사 가 많았다. 이후 경찰이 사건의 원인을 ‘여성혐오’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결론 내리자, 강제입원 등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와 경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늘어났다. 이후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경찰의 강경한 대응 계획과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때부터 ‘모든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반영한 기사들이 등장했다. 언론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의견과 정신질환을 의료적 잣대로만 판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침해”

72시간 내 정신병원 입원도 활용
강선명 경찰. 기자간담회
“여성 불안감 공감하지만 이번 사건은 혐오 아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23일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자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정장은 이날 서울 미군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 범죄에 대응한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란 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에 상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혐오라는 것은 의지적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정장은 언급한 행정입원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기가 마련됐다.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응급입원 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방침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범죄 동기를

100% 설명하기엔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입원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천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의뢰에 관한 부분어기에 한 가지 제대로 평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만 판단도 어렵고 인력도 막대한데 대응 방안이 필요한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일경 장관도 “범죄 가능성이 정신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새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석 달간 여성 상태 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치안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지역·시설, 불안감을 조성하는 인물 등에 대한 제보를 수집한다. 신변 위해를 신고한 여성에게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해어리블 스마트워치’112 자동신고 기능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송준 기자 gamsj@hani.co.kr

〈한겨레신문 2018. 9. 13. 사설/칼럼 23면〉

편견·제도 미비 틈타 ‘감정 폭탄’ 조울증, 결국 살인 불렀다

5년간 지속 증가-개선책 절실
구분한 치료 요치지만 강제입원 한계 심리치료 비용 부담-투약에 의존 환자 급증에 상당료 사실상 불가능

조울증(양극성 정서장애) 환자가 자신을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원치료를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치료보다 약물치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정신질환자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다. 자살적인 행동을 통해 충성심의 권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자 개입의 지체로 인해 의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 자체는 해결이 없다. 의사단체들은 조울증 환자 백5000명 가 시골 중소구급차병원에서 진료 중인 정신과 의사 원모(40대)를 살인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일 긴급회의를 열 뒀다. 이들은 병원진료 소스아웃에 이 사건을 조울증 환자 전체에 보편화

다. “조울증 환자는 조증으로 들뜨는 시기에 복이 거부기까지 치열순환이 잘 안 된다”며 “입원치료가 더 좋지 않음 조증은 평소와 같지만 조증과 조울증이 교차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강제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져 자살의 위험이 분명한 때에 입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가족, 의료진이 간혹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스스로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진을 따라야만 입원치료가 가능한 구조다. 이송준 오정신건강의학과원장은 “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울증 환자는 조증으로 들뜨는 시기에 복이 거부기까지 치열순환이 잘 안 된다”며 “입원치료가 더 좋지 않음 조증은 평소와 같지만 조증과 조울증이 교차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강제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져 자살의 위험이 분명한 때에 입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가족, 의료진이 간혹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스스로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진을 따라야만 입원치료가 가능한 구조다. 이송준 오정신건강의학과원장은 “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준 오정신건강의학과원장은 “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준 오정신건강의학과원장은 “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9.01.02., 종합 08면〉

해자 발생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하는 양이 늘어났다.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직후는 정신과 의사를 보호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과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학·행정적 관리 방안이 집중 보도되었다. 사건의 가해자가 퇴원 후 일 년 만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유가족의 기자회견 영향이 컸던 탓일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심해질수록 환자들은 치료를 기피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기고가 이어졌다. ‘정신질환자=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의 확산을 우려하는 보도도 늘어났다.

특히, 입원치료를 한계, 심리치료보다 약물치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의사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 못하는 상황,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신보건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심층보도가 이어졌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언론보도와 차별화 된 점이라 하겠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직후에는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언론보도에 묻어났다. 범죄 발생 전 피해주민들이 여러 차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던 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시스템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으로 보도되었다.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에서 다루진 이슈들이 보다 깊이 있게 보도

되는 기사도 눈에 띠었다.

예를 들면, 퇴원 후 지속적인 병원 진료와 약 복용을 하지 못한 것을 범죄의 원인으로 규정한 경우다. 강제치료를 제도화하지는 입장과 정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입장을 전하면서, 주요 언론은 강제입원 등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해야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겨레(5월 14일, 오피니언 25면)은 “심리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상담시간 대비 임금의 차이가 있어 약물치료를 집중하고 있고, 비정신 심리치료 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기에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할 때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출신 전문가 관료로 구성해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조현병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을 향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일부 환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조현병을 범죄의 원인이나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자고 하지 말고 마음의 병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고통이기에 더 이상 손가락질을 그만두라.”고 정신질환자를 비난하는 여론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이후로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보도도 증가했다. 지역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우선 받도록 제도화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어 도입 되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정신장애인 가족의 고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을 기사화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진주 방화·살해범은 왜 그랬을까

오현성
미국 예르츠나우협회 교수·사회복지학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하고 무자비하게 인공격을 사행하여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분자마 사건”이라고 언론들은 속보를 발표했다. 피의자의 조현병 병력이 드러나니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분자마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과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해치려는 시도가 발견되며 “계획된 범죄”로 이 사건은 이름을 바꾸었다.

과연 조현병이 사건의 원인일까? 조현병과 일부 정신질환 환자들은 “정신병적 급성기 증상”을 겪는다. 이 증상을 겪을 경우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며 폭력성이 과도하게 높아지기도 한다. 만약 폭력사건이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발생했다면 조현병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계획을 세우고, 방화를 하고, 흉기를 20명 가까이 사람들에게 휘두른 이 사건은 일시적으로 손상된 인지기능을 경험하는 환자가 했다고 믿기 어렵다. 경찰은 피해망상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망상이란 것이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견된다.

피의자는 과거 범죄전력이 있을 정도로 범죄 위험이 높았다. 1년 동안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미래 범죄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 경찰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내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직업재활, 옹호활동, 일상기능 및 사회관계성 재활 등을 촉진하는 정신재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가 살기 위한 필수재이다. 피의자가 경험한 피해망상 역시 주요한 정신재활 서비스의 치료 대상이다. 독일에서 2000년대 후반에 검증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약 60분 길이의 집단심리치료로 8주간 제공했는데,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망상 증상이 36.4%나 감소했다.

한국 역시 이런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정신요법료를 통하여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을 지원한다. 2017년에 국민건강보험은 55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정신요법료로 지출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정신의학전문분야의 주요 정신요법의 수가 정수를 가능하게 한 비합리적 규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문제는 8주간 총 8시간에 달하는 시간적 투자를 하기에 정신의학전문분야의 임금이 너무 높고, 정신의학전문분야에 받는 훈련은 심리치료보다는 약물을 사용한 접근에 집중하고 있다. 비정신의학전문분야가 제공하는 심

리치료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지원하지 않은 결과,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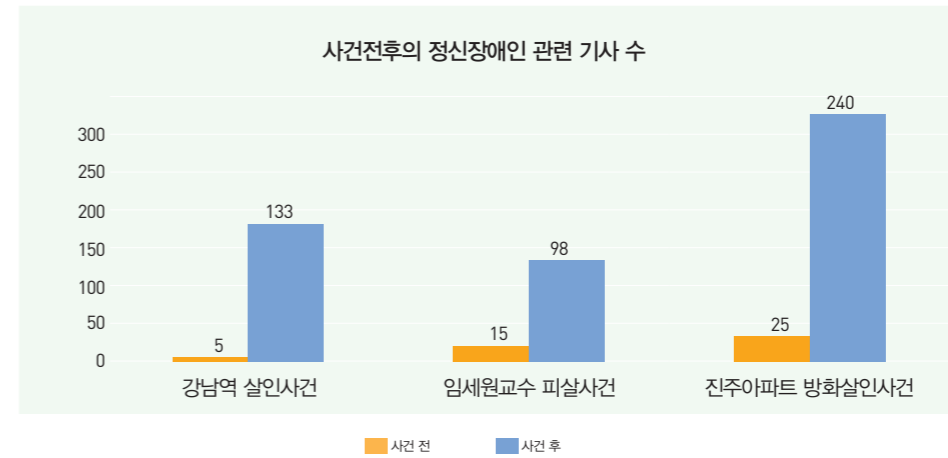
둘째,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의학·법학·사회복지·심리·정신재활 등 다학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책 수립 과정을 주도하는 관료의 전문성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해야 하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월 일당 사건을 보면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을 향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일부 환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한 개인을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중 극소수 일부는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 분노를 해결하는 길 어려워하고 있음을 최근 사건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조현병이 범죄의 원인이거나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마음의 병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고통이기에 더 이상 이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그만두시라.

〈한겨레, 2019.05.14, 오피니언 25면〉

이상의 세 가지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의 경향은 “폐쇄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격리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개인적 문제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정신질환자가 적정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법적·사회적 환경의 문제를 찾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언론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일상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 심층적 후속 보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사건 발생 30일 전후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조현병’을 키워드로 조사했을 때, 그 차이는 확연하다. 사건 발생 전까지는 정신장애에 대한 보도가 적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법규가 제·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이슈를 다루는 보도 건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건 발생을 기준으로 언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많은 기사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집중 보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히 보도함으로써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여전히 ‘정신병자’, ‘미치광이’ 등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급제 단순화와 전면 폐지

장애등급제에 대한 가장 핵심 논의는 처음부터 장애등급을 전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처음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 70여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에 장애등급(1~6급) 적용을 폐지하고 서비스 종합판정을 도입·적용하거나, 중증장애인 혜택 현행유지를 위하여 1~6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러나 장애계의 전면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 전면폐지 시 장애등급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 제공기준이 없어서 혜택이 축소되거나 당사자가 불편해지므로, 필요한 경우 의학적 중·경증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최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서비스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심사하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을 비롯해 장애계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정부의 장애등급 단순화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등급 단순화는 진정한 등급제 폐지가 아니며, 중증과 경증을 나누어 종합판정도구가 개발되고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새로운 등급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장애등급 단순화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현재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제도에 3급 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이 유일한데, 이것 또한 장애인연금제도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감면·할인 제도에서만 적용하고 등급제 완전 폐지를 장애인복지법 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핵심쟁점 논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 시작되는 장애인등급제는 장애등급의 전면폐지가 아닌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쟁점 하나. 소득보장체계

이와 같이 중·경증으로 단순화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정책 상 소득보장 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감면·할인제도 등 3가지로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보장체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소득보장제도 일 수 있다. 이는 소득보장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무기여식 연금제도인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및 장애 아동수당, 최종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체계는 장애등급(의학적 손상 정도)과 연동하여 현금 및 현물급여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1급~중복 3급)과 장애수당(3급~6급)의 경우 자산조사 결과와 더불어 등급을 구분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급제가 1~3급, 4~6급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추가 3급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장연 등 장애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연금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을 통해 무기여 소득보장을 실시하고, 장애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소득조사 없이 장애유무 판정만으로 추가 비용 평균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쟁점 둘. 서비스 제공 체계

둘째, 서비스 제공체계이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보장체계와 달리 서비스 제공체계는 획일적인 기준 대신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장애인 개인마다 다르고, 지원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는 1~3급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급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정조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영역은 개별적인 인정조사표 등을 통해 대상과 급여량이 결과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서비스 영역에서 장애등급이 유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조사 도입을 시작한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선 소득·고용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지원하게 된다.

쟁점 셋. 감면 및 할인제도

마지막 쟁점은 감면·할인제도이다. 감면·할인제도의 경우는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 영역이다.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에게 모두 제공되는 감면·할인제도의 경우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무관하지만,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중증장애인에게 특히 1,2급에만 지원되는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감면·할인 기준에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지원서비스가 축소되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은 유지 하되,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방향은 장애등급을 정책영역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최소한의 의학적 등록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며, 장애범주의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미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간 형평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 정부는 장애등급 단계적 폐지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를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장애등급의 폐지, 생활안정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활용한 18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다른 기관, 특히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는 감면·할인제도의 개편 방안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2019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

“장애인의 눈으로 본” 언론 모니터링

01

10대 종합일간지의 장애관련기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장애관련 표현법과 용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전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

02

부적절한 장애관련 표현법과 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리포트 제공을 통해 언론사의 장애 감수성 제고 및 표현법 시정

03

'이 달의 좋은기사, 칼럼, 사진' 공개를 통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장애관련 보도 유도

04

매월 전 달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분석한 언론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지면신문·인터넷신문·언론 협회와 단체·정부기관·장애인단체 등 약 1,000곳에 리포트 발송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의 관건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 제도권의 문지기에 만족할 것인가

안형진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집행위원장

한국사회는 참으로 역동적이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독재 등의 암울한 역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역동성과 창발성에 힘입어 불과 30여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역동성은 유감없이 나타난다.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 ‘병신’, ‘불구자’란 단어로 대표되었던 암흑 같은 현실이 80년대까지 장애인 정책의 수준이었다. 불과 3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장애인의 시민권 확보 운동으로 대표되는 자립생활 운동을 거쳐 개인예산제로 대표되는 장애인 서비스 현금화를 거론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마냥 바람직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서둘러 도입되고 확산된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점은 간과되고, 현실에 맞게 조작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약 3년 전부터 국내 장애계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직접지불제로 대표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화가 거론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장애인권운동을 강력하게 한 장애인 당사자조직이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체 등이 당사자주의와 소비자주의를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장애인 서비스 현금화를 쟁취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운동 조직과 자립생활센터들은 설왕설래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보아도 역동성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심이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화가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은 무엇인가 짚어보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범했던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왜곡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현금화

개인예산제는 능동적 시민권을 지향한다

마이클 올리버 등이 주장한 사회적 장애 모델과 자립생활 담론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시민권(civil rights)'이다. 시민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결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에서 자유와 평등은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협의한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다. 시민권에서 재화의 분배 역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협의한 법 테두리 안에서의 분배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의 재화에 대한 선호와 욕구를 검증하고 사정하는 권한을 특정인들에게 준다.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민권'이다. 그렇다면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협의인 법과 제도는 과연 완벽한 것인가'라는 반론이 '능동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의 출발이다.'⁽¹⁾

예컨대 '왜, 회의나 강의를 할 때 떠들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회의나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자고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강의를 할 때 떠들면서 돌아다니면, 비정상 취급을 받고 그의 선호와 욕구는 철저히 묵살된다.

재화의 분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저 다수가 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재화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철저히 묵살해버리며, 심지어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문지기(Gate-Keeper)까지 세워 놓는다. '능동적 시민권'은 다수가 편하자고 협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묵살하는 각 개인의 존엄한 선호와 욕구, 즉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다.

장애인단체는 시민권의 문지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는 '시민권'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든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각 개인의 선호와 욕구는 그것에 양보하는 것이 '정의(正義)'였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은 배제되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투쟁해왔으며, 이것이 이제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등의 장애인 시

민권 운동이다.

그런데 이것의 한계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권은 개인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하다. 교활한 제도권은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장애인권 운동세력에게 채찍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주는데 그 대표적인 당근이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협의한 법체계 속에서 자금과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도권은 그 자금을 통해 장애인 각 개인들의 선호와 욕구를 조정할 수 있는 '시민권의 문지기' 권한을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에게 준다. 제도권은 이를 통해 제도권이 나서기는 골치 아픈 장애인 개개인의 선호와 욕구를 통제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은 이 시민권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자금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쉽사리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권 운동단체들과 자립생활센터들은 이 계류⁽²⁾ 같은 '시민권 문지기'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 개인의 선호와 욕구에 맞는 자금을 주어야 한다는 '능동적 시민권의 동지' 역할을 선택했다.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정책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적인 것까지. 현재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화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그 나름대로 논리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관통하는 현실적 관건은 '시민권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와 자립생활센터들이 '능동적 시민권의 동지'가 되어 줄 것인가이다.

이 글을 읽고 세부적으로 준비할 것들도 많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매우 많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철로 위에 제대로 만든 우리의 기차를 달리기로 결정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설왕설래 하느라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부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잘 만든다 해도, 그것들은 책장에서 고이 잠자

(1) Power, A., Lord, J. E., and A. S. deFranco., 2013. 『Active Citizenship and Disability : Implementing the Personalisation of Support』.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달의 갈비'라는 뜻. 큰 쓰임이나 이익은 없지만 버리는 아까운 상황. 물건을 나타낸다.

는 사업보고서나 연구보고서 밖에 안 될 것이다.

이상으로 말하고 싶은 현실적 관건은 다 이야기했다. 끝으로 현재 장애인권 운동 진영에서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되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서비스의 현금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사회복지인간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면 장애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 진다는 논리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들, 그것도 인권과 시민권을 주창하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이 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히 유감스럽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출현은, 경제적 낙오가 정치적·사회적 배제로 이어져 사회의 공적인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계층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경제적 부가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권력에서도 배제되는 대다수 계층의 문제, 자본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회복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두 번째 이슈는 자원할당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에 수행한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³⁾에 이미 그 해답이 있다. 그것은 신체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유연화하거나 현금화 하면 되고, 발달장애인에겐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파악하는 도구(PCP), 자원할당 도구(I-can, SIS, I-CAP), 전문지원인 육성 등의 전제 조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지급하면 된다.⁽⁴⁾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 체제 도입이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것이 이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부

(3) 김용득, 2017.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 「서울시 장애인예산 평가 및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251~402.

(4) 윤재영, 2015. "발달장애인 개별예산 할당도구 비교 연구: ICAP, SIS, I-CAN의 동시 타당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 할당 척도개발 연구 성과보고회 자료집: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1~18.

분에 대해서 입장이 확고하다. 전문가주의를 표방하는 기관이든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기관이든, 장애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퇴출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은 법적 지위가 아직 없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토로한다. 이 '투정'은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똑같았다.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정치력과 투쟁력이 없어서,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장애인 소비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젠 결단해야 한다

지하철 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으면서 오직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싸워온 자립생활 운동이다. 그것에 헌신한 사람들은 몇 명의 명망가 장애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장애인 대중이다. 장애인 대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제도권에서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시민권의 문지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장애인 대중은 그 권한을 장애인 각 개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들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던져주는 '시민권의 문지기'역할에 만족하지, '능동적 시민권의 동지'로 나아갈지. 이것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에 있어서 관건이다.

참고문헌

1. 김용득, 2017.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 「서울시 장애인예산 평가 및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251~402.
2. 성숙진, 2001. "미국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운동 개념과 발전 과정". 「재활복지」, 6(2): 24~54.
3. 윤재영, 2015. "발달장애인 개별예산 할당도구 비교 연구: ICAP, SIS, I-CAN의 동시 타당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 할당 척도개발 연구 성과보고회 자료집: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1~18.
4. 이승기 ·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복지학」, 23: 235~249.
5. Dejong, G. 1979.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0(10): 435~446.
6. Duffy, S. 2010. "The Citizenship Theory of social justice: exploring the meaning of personalizing for social worker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4(3): 253~267.
7. Power, A., Lord, J. E., and A. S. deFranco., 2013. 「Active Citizenship and Disability: Implementing the Personalisation of Support」,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석 역, 1999. 「정의론」, 서울: 이학사.
9. 2001, 「JUSTICE AS FAIRNESS」, edited by Erin Kelly, The President and Fellows Harvard College. 김주희 역, 2016.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강동권 편, 서울: 이학사.



▲ 열린관광지 권역화 이미지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공모 방식 변경 관광+교통+숙박+음식+쇼핑, 관광권역화 장애인 관광환경, 이상과 현실 사이

윤선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설명회를 5월 15일 기초자치단체 관광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는 올해 5년째다. 기존 공모 설명회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늦은 편이다. 공모 방식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기대와 관심 속에 공개된 2019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는 그 내용과 형식이 통째로 바뀌었다.

관광+숙박+음식+쇼핑+교통의 관광권역화

우선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이 변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였다. 즉 관광지 소유자(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2019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관광지만 1개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올해부터는 최소 4개소, 최대 10개소의 관광지(관광지·교통·숙박·음식·쇼핑)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에 관광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¹⁾에서, 관광지와 연계한 교통, 숙박, 음식점의 접근성 문제를 비롯하여 유지관리의 문제, 열린관광지 브랜드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특히 관광지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교통, 숙박, 식당 등 관광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장애인 단체, 언론에 그 결과를 공유했다.⁽²⁾

(1) 결과보고서 전체내용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www.ableinfo.co.kr) 결과보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광주KBS라디오, 광주MBC라디오, 전남CBS 라디오, 에이블뉴스, 미디어오늘, 광주일보 등에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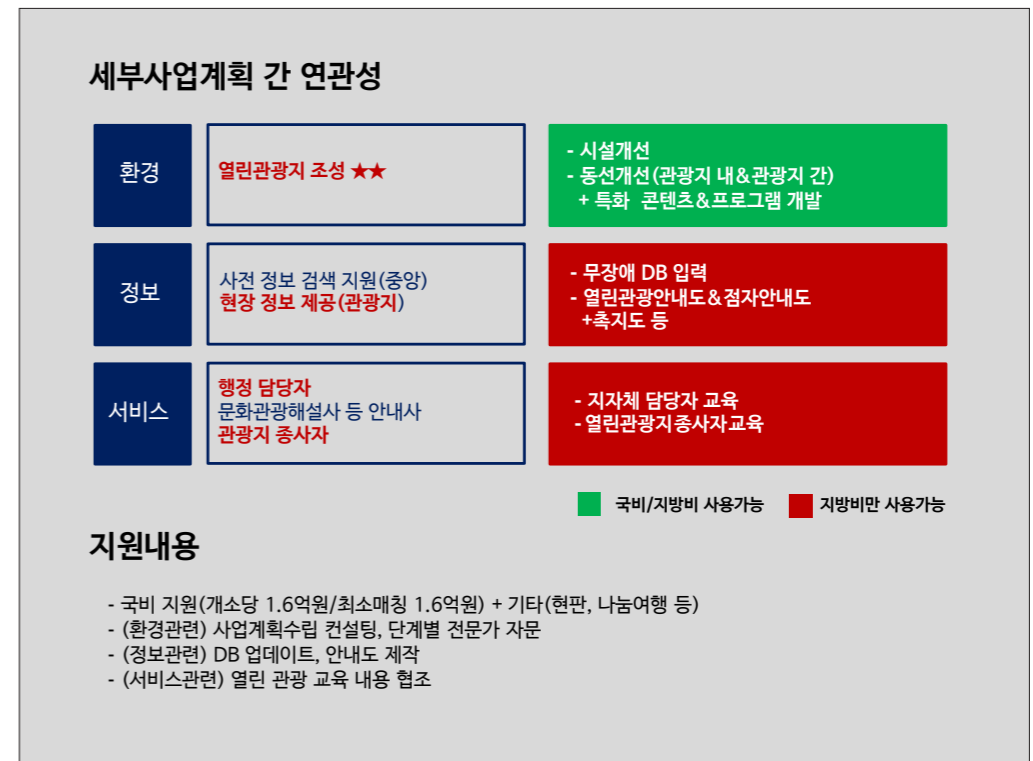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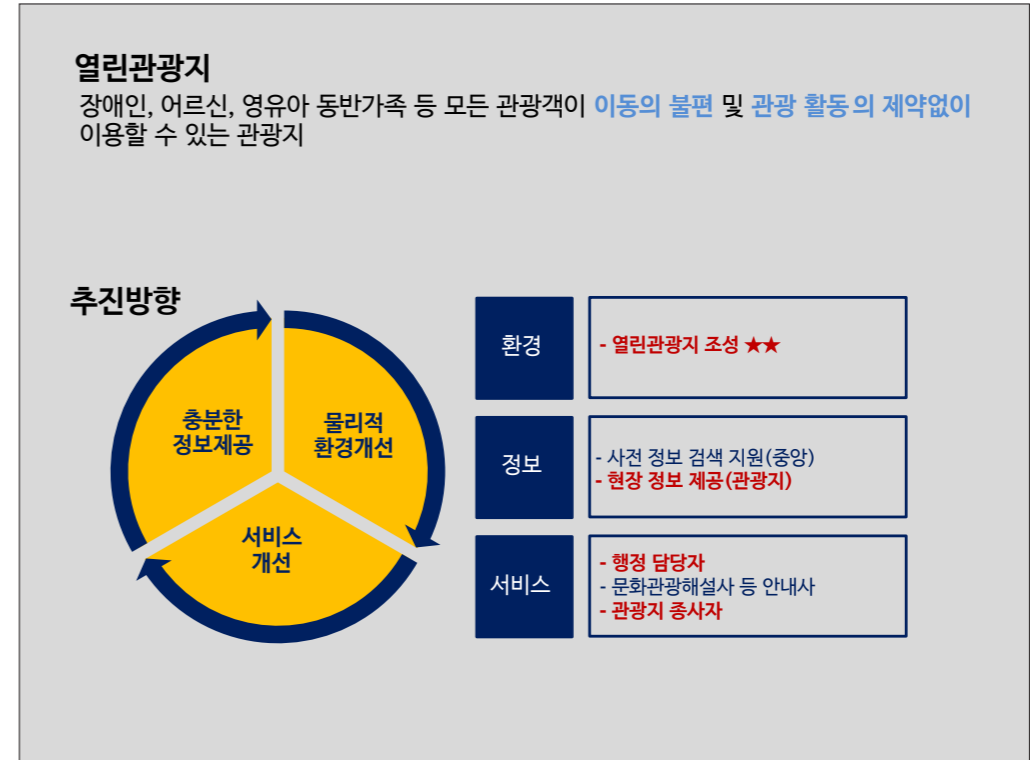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의 방향이 관광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관광지 연계 환경을 포함하는 관광권역화로 바뀐 점이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장애인 관광객에게 가장 큰 불만이었던 숙박, 음식, 교통, 쇼핑을 연계한 열린관광지의 관광권역화는 장애인들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관광을 현실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표1 열린관광지 공모방식 비교

구분	기존(2018년 까지)	변경(2019년 부터)
공모대상	관광지 1개소	4~10개소의 국내 관광지*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 5대 접점으로 관광코스에 포함될 수 있는 곳. 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 제외
신청자격	관광지 소유 사업자 (민간, 공공 구분 없음)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예산사용	개소당 3.2억원 (국비 1.6억원 포함) 해당 관광지에서만 사용	관광권역별 사업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관광지별로 투입되는 예산비율 조정 가능 *(예: A, B, C, D 관광지점을 '가'권역으로 신청할 때, 1.6억×4개소×2배(최소매칭)=12.8억원에서 2천×4개소=8천만원을 제외한 12억원은 A(5억), B(5억), C(1억), D(1억)으로 사용 가능)
국비교부	1회 (사업계획 확정 후)	2회 (사업계획 확정 후 1억원 + 현장점검 후 0.6억원)

센터 모니터링에서 지적했던 '관광지 매력도' 항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부터 신청하는 열린관광지는 한국관광 100선과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관광지를 포함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최근 3개년 평균 방문객 증가율, 노약자 및 장애인 방문 비율, 관광콘텐츠의 차별성' 같은 항목이 기존 관광지 매력도 평가방식이었다.

기존 평가방식은 열린관광지 지정이 대중적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인 관광객도 누구나 선호하고 즐겨 찾는 관광지로 떠나고 싶어 한다. 더구나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수단의 문제, 숙박의 어려움 때문에 관광 경험이 적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잘 알려지고 호감도가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 기존 열린관광지 매력도 평가방식은 이러한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다.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평가와 가산점제는 장애인 누구나 가고 싶은



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지정될 가능성을 보다 높였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관건은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의 구성

관광지 1개소 신청에서 최소 4개소 ~ 최대 10개소의 관광지점을 연계한 관광권역별 신청으로 공모방식이 바뀌면서, 관광권역별 총괄표와 관광권역 사업계획서가 신청서류에 추가되었다. 어떤 관광지점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연계하여 권역 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필수 항목인 전문가 자문이다.

‘자치단체의 열린관광지 사업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줄 BF, UD⁽⁴⁾ 등 관련 전문가’라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열린관광지 지정 후 생겼던 개선공사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교체로 생기는 연속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국관광공사 최영걸 차장(관광복지팀)은 설명한다.

“그 취지와 의지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BF나 UD 전문가만을 가이드 라인에 명시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전운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전 열린관광지 심사위원)의 의견이다. 관광권역 전반의 자문역할을 하게 될 전문가 선정은 개선공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을 담당했던 김병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팀장도 전문가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지적한다. 사업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 ‘BF, UD 등 관련 전문가’라는 가이드라인은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다. “취지는 사실상 시행사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F, UD를 포함하는 유사사업 경력의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의 자문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광정책과 허병선 주무관은 ‘BF, UD 전문가 외에 무장애관광 경력자나 유사사업 경력자 모두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열린관광지 심사위원의 구성 방향과 자격에 관해서 ‘관광의 공급측면에서는 관광 전문가와 무장애 환경전문가를, 수요의 측면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을 고려한 심사위원의 구성과 위촉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3)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 우수한 국내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한국관광의 별은 지난 2010년 처음 제정.

(4)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UD(Universal Design : 보편적 디자인)

표2 2019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요소	평가내용					
		확보안함	확보함				
정량평가 (20점)	기 확보 예산 (국비 외 금액) (10점)	0점	($\frac{\text{기 확보 예산(A)}}{\text{필수 자부담(B)}} $)×10점 *A는 신청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B는 신청한 관광지점 개소수×1.6억원으로 계산 (최소 6.4억원(4개소) ~ 최대 16억원 (10개소)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며, 최대 10점까지 인정 *(예) 4개소 신청 시, 기 확보예산이 5억원인 경우 A=5, B=4×1.6=6.4으로 점수는 7.81점				
	총 자부담 매칭율 (국비 외 금액) (10점)	(개소기준)					
		100% (1.6억 이상)	125% (2억 이상)	150% (2.4억 이상)	175% (2.8억 이상)	200% (3.2억 이상)	
		2	4	6	8	10	
		*총 자부담은 신청시점에 기 확보된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기간 내 확보가능성 으로 판단(신청시점에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 확정 전(8월 경)에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면 인정(확약서 제출) *단, 계획대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중단 및 환수 등 제재					
정성평가 (80점)	관광지매력도 ⁽⁵⁾ (20점)	인지도	널리 알려진 관광지인가?				
		매력도	가고 싶은 매력이 있는 관광지인가?				
	환경준비도 (20점)	외부접근성	주요 교통거점(기차역, 버스터미널) 및 자가용으로 접근하기 편리한가?				
		내부이동성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이들 관광지점 내에서 이동하기 편리한가?				
		정보제공	무장애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운영관리		관광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개선계획 (20점)	타당성	추진방향이 타당한가?					
	체계성	추진내용이 체계적인가?					
	구체성	추진계획이 구체적인가?					
실현가능성 (20)	실현가능성	관광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주어진 사업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가점(5점)	대표관광지 포함	신청 권역 내에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2016~2018 한국관광의 별 포함 시 각 1점, 최대 5점					

(5) 기준표의 분홍색 부분인 ‘관광매력도’와 ‘환경준비도’는 권역단위 평가가 아닌 지점단위로 평가항목이다.

최대 20개 관광지점, 총32억 예산 지원

문체부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각 목 명세서를 살펴보면, 열린관광 환경조성 관련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약 40억 원⁽⁶⁾이 책정되어 있다. 이중 '32억 원이 열린관광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 외의 예산은 '컨설팅 등 사업관리, 무장애 정보제공, 나눔 여행, 연구용역 등의 예산'이다.

관광지 1개소 당 지원되는 국비는 1억6천 만 원으로 기존 공모방식과 같다. 달라지는 점은 관광지와 숙박, 교통, 음식점, 쇼핑 등 관광지점이 다양화 되면서 개소 당 1억6천 억 원을 균일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관광지의 개선공사 비용과 음식점의 개선공사 비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역별 지원금 총액 안에서 관광지점의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 2천 만 원, 숙박 2천 만 원, 관광지 2개소 6억 원으로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열린관광지, 이상과 현실 사이

우려되는 것은 관광권역을 관광지, 음식점, 숙박, 교통, 쇼핑의 5대 접점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공허한 '이상'으로 끝날 경우다. 실제로 설명회 당일 지자체 관광과 실무자들의 질의과정에서도 이런 질문은 나왔다. "관광지로만 5개소를 구성해 관광권역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문체부 박민정 사무관(관광정책과)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민간시설일 확률이 높은 음식점, 쇼핑, 숙박을 고루 포함하여 관광권역을 구성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열린관광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공사는 관광지 접근성 개선공사와는 다른 차원의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선정 기준의 문제부터 자부담의 문제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관광지+관광지+관광지+관광지'만으로도 관광권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는 위험하다. 이러한 단서는 개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방식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을 열린관광지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자체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후퇴할까 우려된다.

(6) 총 4,046,000,000원. 세부내역은 코드 [320-01] 150,000,000원, 코드 [330-01] 250,000,000원, 코드 [330-03] 3,646,000,000원.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나의 특별한 형제

세상엔 이런 형제도 있다!

머리 좀 쓰는 형

몸 좀 쓰는 누나

2019.05

신하균 이광수 이솜 • 각본·감독 육상호

특별하지 않은 장애인의 등장 육상호 감독의 <나의 특별한 형제>

류미레 푸른영상, 독립영화 감독

이번 호 소개할 육상호 감독의 <나의 특별한 형제>는 참 특별한 영화입니다. 주인공들의 든든한 의지처럼 박 신부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살아가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특별한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세하와 동구 형제의 관계는 전래동화⁽¹⁾를 연상시킵니다. 전래동화의 주인공들은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번 영화의 주인공들은 발달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경추손상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세하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 동구는 영화 속에서 5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설명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세하가 '책임의 집'에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영화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을 한 몸처럼 살아온 두 사람의 사연과 역사를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책임의 집'을 운영하던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지원금이 끊기게 되고, 장애유형이 다른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영화가 그려내는 상황 때문에 영화 밖 현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일, 좋은 영화의 역할이지요. <나의 특별한 형제>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영화입니다.

박 신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관객이 느끼는 갑작스러움은 단지 영화적 표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후 상황을 통해 알게 됩니다. '책임의 집' 재정 상태는 열악하고 박 신부 개인의 헌신으로 확보해왔던 후원은 박 신부가 세상을 떠나자

(1) 전래동화 '장님과 앓은뱅이'를 권정생 작가는 '길 아저씨 손 아저씨'의 그림책으로 펴냈다.

봄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맏형에게 부양의 책임이 승계되듯이 이제 ‘책임의 집’ 식구들을 책임지는 일은 세하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로 생계를 이어가는 당당함

봉사 활동 점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취업준비생들에게도 봉사활동 점수는 꼭 필요합니다. 세하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책임의 집’이 처해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식구들 먹을거리를 사려다 돈이 모자라게 되자 편의점 주인이 돈 대신 딸의 봉사활동 점수를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진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말에 “같이 노는 건 만원, 밥 먹여주는 건 2만원, 씻겨주는 건 3만원”이라고 말하는 세하의 당당함은 신선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거리낌 없이 사진을 찍어대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늘 비판받아왔지요.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장애인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를 영화는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돈을 말하는 세하의 모습에서 통쾌함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나중에 법정 장면에서 세하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계기로 이 부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딱 그만큼입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가 선 자리는 그렇게 새롭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보여준 장애현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캐릭터도 새롭습니다. 동구의 엄마 정순이 뒤늦게 자식을 책임지겠다며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의도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정순은 식당에서 식탁을 닦다가 TV에 나온 동구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등장은 익숙한 사연을 예상하게 합니다. 가난한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식을 버렸다가 자식이 출세하자 다시 자식을 찾는 설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알

고 보니 정순은 그 식당의 주인이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동구를 애타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들은 평범하지 않은 악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범하고 각자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바로 그래서 장애현실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갑자기 불행한 상황에 처해져 장애가 있는 자식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자 수영장에 버려두고 온 정순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순은 곧 뉘우치고 애타게 자식을 찾습니다. 동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 받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지나간 세월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동구와 함께 살겠다는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저래야만 하나’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다 자란 자식, 세하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구를 꼭 저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옆에 붙들어 매야만 하는 건지 살짝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장애가 없는 자식들도 결국 독립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가끔 밑반찬을 챙겨 주는 식으로 애정을 표현 하잖아요.

감독은 동구가 세하를 떠나 정순과 살다가 다시 세하 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세하와 동구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동구가 세하의 모든 신변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보며 누군가는 둘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정순의 입을 통해 처음 표출됩니다. “우리 동구가 평생 세하 씨 수발이나 들고 살아야 시원하겠냐?”는 정순의 말에는 동구의 역할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세하는 법정에서 “내가 동구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동구 또한 나를 이용한 거다”라고 항변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돌봄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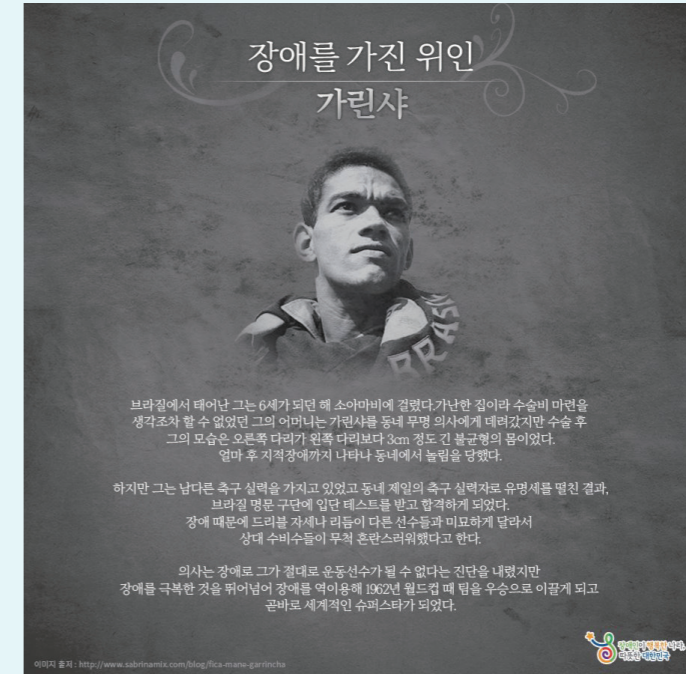
하지만 정순과 함께 살게 된 동구의 일상을 통해 세하의 말은 다시 의미화 됩니다. 하는 일 없이 돌봄만 받는 일상 속에서 동구는 존재감을 잃어갑니다. 그제서야 우리

는 알게 됩니다. 세하를 돌보는 일은 동구에게 희생이 아니라 일이었고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세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효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하가 새로 옮겨간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악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기능적인 사람입니다. 동구는 세하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며 양치질을 해주었지만 사회복지사의 눈은 늘 휴대전화에만 가 있습니다. 식사시간에도 그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기능만 제공하는 관계.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세하의 반응이었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본다거나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그만큼의 인간이니까 나 또한 너를 딱 그만큼만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거나 할까요. 세하는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삶에 대한 통찰과 혜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행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역시나 사무적인 대응만 할 뿐입니다. 화를 내거나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지요. 이 태도는 동구의 수영선생인 미현을 대하는 태도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세하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장애인 영화 역사상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는 장애인 영화로서도 의미 있지만 뜻 깊은 결말을 선보임으로써 모든 관객들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는 결말 부분에 동구가 수영 경기 중 늘 멈춰 서는 이유를 알려주며 내면의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우리들 모두는 내면에 덜 자란 아이를 품고 있는데, 동구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아닌 세하가 동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끝을 맺습니다. 논리와 감성,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하지 않은 채 덜거름 없이 머뭇거름 없이 꾸준한 레이스를 펼쳐낸 <나의 특별한 형제>, 망설임 없이 올해의 영화로 추천합니다. 꼭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 서울(대표 이권희) T 02-833-309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 부산(대표 김호상) T 051-582-3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 대전(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지 15-4 동진프라자 332호
- 광주(대표 김 량)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 울산(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 경기(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경남(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 전북(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 4길 6-23
- 충남(대표 박종균) T 041-631-0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 제주(대표 김성완) T 064-751-8096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9 서울시 장애인 공감·나눔 축제

서울시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장애인 공감·나눔 축제가 6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사회통합의 공감대 조성 및 장애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축제는 건강체크, 안전교육, 레크레이션의 체험관과 유니버설디자인작품, 장애인예술 작품전시관, 발달장애인 출장 카페, 장애인보장기구 수리점검, 타로카드 등의 홍보관으로 구성되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많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2018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17일 안미선 대표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안미선 대표는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해주신 이용자분들과 애정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더욱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시 장애인 탈시설정책을 위한 토론회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6월5일 일산동구 2층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생활 실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의 중요성’,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계방안’, ‘지역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 제안’,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 로드맵’으로 진행되었다.

(사)대전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혐오·차별 예방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정 11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 정책 발제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혐오·차별 예방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회를 (사)대전장애인인권포럼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함께 주최하였다. 토론회는 4월 18일 2시 라온컨벤션 가람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애 관련 인권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 8회 전국 장애인 연극제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5월 21일부터 24일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장애인 연극제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극단 멋진친구들, 장애인문화예술극회 월, 극단 도란도란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물 위의 모든 것, 스코트라

- 수상태양광, 해양레저, 수상플로팅, 수상건설 등 수상 부유구조체 설계, 제작 및 시공 전문기업으로서 안전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4년부터 개발된 멀티룸 플로트는 일반형 플로트보다 높은 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플로트 위 수상부유식 건축물 제작과 중장비 주행 테스트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

Wherever

백령도에서 제주도, 독도까지 전국 어디든

What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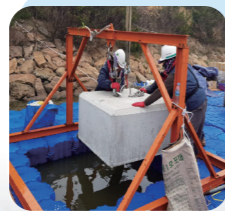
부교, 계류시설을 포함한 물 위의 모든 것을

However

설계, 제조, 시공, 임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드립니다.

적용 사례



Everything on the water 물 위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스코트라에서 설계하여 18년도에 완공한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18.7MW) 전경입니다.

스코트라, 국내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총 40MW 이상의 수상태양광 수행 경험과 국내 유일의 댐 시공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고 품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 유휴수면 사용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소 부지 한계 극복
- 환경영향평가로 생태보존성 우수성 입증
- 수면냉각효과에 따른 발전효율 향상

1,200건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수상플로팅 전문기업!



일반형 플로트 및 전 세계 유일의 특허제품인 멀티룸플로트를 활용한 계류장, 마리나시설, 수상레저시설, 부잔교 및 수상태양광 부유구조체 등의 설계·제조·설치·임대 등 수상플로팅 사업 전반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